



한·캐나다 환경기술평가 양해각서 교환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월 2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환경기술평가(ETV)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 환경기술평가의 기준 ▲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공동연구 수행 ▲ 자문 및 정보교환 활동 촉진 등을 담겨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술평가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환경기술의 세부적인 선진분석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양국간에 환경기술평가에 대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게 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95년 9월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나 환경기술평가에 관한 협력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내용을 추가해 각서를 교환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그린피스 환경보호운동 전략 바꾸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그동안 환경보호운동을 펴기 위해 이용하던 고무땀목, 젖은 옷, 수갑 등을 버리고 공해배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벌이도록 압력을 넣는 새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가 있는 그린피스는 지난 3월 14일 이러한 새 전략에 따라 세계 최대 석유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로열 더치/셸 그룹의 주식 4천400주(25만 유로, 24만 달러)를 매수하여 대규모 태양집열판 생산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전략은 기존의 환경 보호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해상에서 유독 물질을 실은 화물선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공해 배출 산업공장을 찾아가 공장 문제 스스로 자기 손을 묶는 등의 거친 실력 행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 그린피스는 새로운 방법인 투자를 통해 공

해 배출 회사들이 방향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산더 반 에그몬트 그린피스 대변인은 “공해 배출 회사들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면서 “주식 소유가 경영진에 영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투자를 통해 신원이 증권거래소에만 알려지는 다른 주주들에게 그들의 제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린피스가 4천400주를 매수한 목적은 오는 5월 9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셸 그룹이 연간 500만개의 태양집열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도록 하는 자체 제안을 주주들이 적극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피스는 또 컨설턴트들의 지원을 받아 나머지 21억 4천주의 주주들이 태양 집열판을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는데 컨설턴트들은 셸이 태양 에너지 분야 투자로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헝크 분더 셸 그룹 대변인은 그린피스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주총에서 그들의 활동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해양온도 50년대 이후 급상승

미국 해양대기국(NOAA) 소속 과학자들은 최근 40년간 세계의 해양 온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 1940년대부터의 해양 온도 데이터를 폭넓게 분석한 결과, 50년대 중반부터 평균수온이 해저 270m 부근에서는 0.31℃, 깊이 3천 m의 심해저도 0.06℃ 상승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난 3월 24일 발간된 사이언스지에서 밝혔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온 상승은 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으며 인도양은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번 발견은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싸고 간과해왔던 대양에 의한 열 흡수를 밝힘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에 관한 컴퓨터 예측 모델의 유효성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팀을 밝혔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학자들은 컴퓨

더 기상예측 모델이 과거의 지구 온난화를 과장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역사적 온도 기록은 대부분 해수면이나 대기온도에 그쳐 해양이 흡수한 열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100년동안의 온도는 고작 0.56℃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OAA 학자들은 지난 1948부터 96년 사이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세계 3대양 수심별 수온기록 5백여만건을 7년에 걸쳐 분석하는 등 처음으로 세계 3대양의 해저 3천m 이하의 온도 변화를 계량화했다.

NOAA 해양온도 연구소의 시드니 레비투스 소장은 수온상승의 절반정도가 해저 300m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우리는 대양이 열을 흡수, 해수면 아래의 바다로 옮겨 대기에서 분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견은 바다가 지구 기온 상승을 차단한다고 주장해 왔던 학자들에게도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수소의 짐 한센은 이번 발견에 대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과, 온실효과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인도차이나 삼림 황폐화 위기 직면

환경전문가들은 지난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 삼림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20년간 사라졌으며 이 결과 이곳에만 생존하는 식물과 동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후원하고 아시아 및 전세계 환경 전문가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나홀 간의 회의가 끝나면서 나왔다.

이들은 수많은 생물종의 타임 캡슐처럼 기능해온 이곳 생태계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생물종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밀림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영국학자 윌 덕위스씨(氏)는 “지난 수일간 위험지역을 지정했다”면서 “이 지역이 앞으로 자체 가치를 유지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WW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의 삼림 황폐화는 베트남이 54%로 1위를 차지했다. 캄보디아는 19%로 2위를, 라오스는 13%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삼림 황폐화는 벌목, 농업,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의 이유로 주로 일어나고 있다.

WWF 보고서는 태국, 남중국 지역이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목재수입을 늘리고 있어 이곳의 삼림 황폐화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불법 벌채 단속은 이렇다할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이 회환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구잡이 벌채와 자연자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이 3개국은 자연훼손 외에는 외환수요를 충당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WWF는 마구잡이 벌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지금같은 황폐화가 지속된다면 이곳 자연자원은 수년 내로 고갈되고 이 결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만 수많은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역은 밀림지역에도 세계적으로 큰 강과 호수, 습지 등이 있어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 물정책 관련 각료선언문 채택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세계 1백3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세계 수자원 포럼 및 각료회의(WWF)는 지난 3월 22일 안전한 물공급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WWF는 이날 각료 선언문을 통해 세계 인구가 60억명에서 향후 25년내에 80억명에 육박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7대 극복과제를 제시하였다.

각료선언문의 초안은 비정부기구 등 민간단체에 의해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회의주최측은 향후 행

등을 유인하는 정치적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물부족 해결대책과 관련해 유엔 관련 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WWF의 한 패널이 막대한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보조의 폐지 및 수도세 인상을 통한 투자 보상 등을 시사한 데 대해 비정부기구들은 물을 "기본적인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오직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중동국가들이 만약 수자원 배분에 실패할 경우 향후 10-15년내에 '물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정부환경단체 국제 그린크로스 회장 자격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현재의 물 수급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10-15년 후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 모두가 이러한 전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12대 유해 화학물질' 예방적 금지 촉구

유독성 환경파괴 화학물질의 수년내 완전 사용금지를 위한 국제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가 지난 3월 20일 본에서 시작된 가운데 워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장관은 이날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화학물질들에 대한 예방적 금지조치를 촉구했다.

트리틴 장관은 매우 느리게 분해되고 먹이사슬에 축적되어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12대 유해 화학물질"의 완전 금지를 위해 110개국 대표가 참석한 제4차 국제환경회의에서 이번 회의가 "가급적 많은 예외를 두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의 범세계적 금지조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엔 환경계획의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화학공장들은 그들의 화학제품이 환경친화적이며 건강에 해롭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 환경회의는 2001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조인식에 앞서 오는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가질 계획인만큼 이번이 되도록 많은 합의 를 도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퇴퍼 총장은 개도국들이 안전한 대체화학 물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하고 그 예로 DDT가 말라리아 전염 모기를 퇴치하는 유일한 수단 물질로 남아있어 대체화학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DDT는 34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다른 34개국에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여전히 말라리아 퇴치에 DDT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부족 현상앞으로 더욱 심화 우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현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2차 세계수자원포럼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으나 귀중한 자원인 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전세계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유엔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물 낭비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 물위원회의 이스마일 세라겔딘 위원장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수자원을 낭용하면서 2025년에는 가용한 수자원이 필요한 양의 50%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에도 중국의 총인구에 해당하는 14억명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23억명 이상의 오염된 물을 제대로 소독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열악한 위생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매년 7백여만명이 물부족이나 물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작지 부족이 아니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식량생산량이 감소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물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과 중동, 인도, 중국, 일본,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남미 북유럽 등으로,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서 심각한 물부족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난 17일 개막돼 22일까지 열리는 제2차 세계수자원포럼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물부족 문제를 전세계 차원에서 해결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92개국 각료급 인사와 15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포럼에서 각국 각료는 2년 내 물부족현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각료들은 2002년과 2003년 독일의 본과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만나 물부족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한 상이한 정치상황과 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물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 정부 내년 이후 지방환경세 도입

일본정부는 내년 이후 '지방환경세'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재원에 충당할 방침이다.

자치성은 2001년 이후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중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방 환경 관련세제 연구회'를 설치,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3월 20일 보도했다.

연구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를 위해 가솔린 등 화석(化石) 연료에 과세하는 '탄소세'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과세하는 것 등을 상세히 검토해 연내에 보고서를 마련하고 자치성은 이를 토대로 내년 이후 세제개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자치성이 현재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 탄소함유율에 따른 세율을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경유거래세 등 현행 세율에 일괄적으로 덧붙이는 방안 ▲ 환경에 악영향

을 미치는 합성수지 물통이나 건전지, 농약 등 제품에 과세하는 방안 ▲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 97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 등 환경 보전대책을 위해 약 6조엔을 지출했으며 그 중 자체적으로 충당한 돈이 4조 7천억엔에 이르러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성 관계자는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지구 온난화 대책 등 앞으로 늘어날 환경 경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환경세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유독성 화학물질 위험 직면

아시아 지역은 산업활동에서 생성되는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에 처해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지난 3월 19일 경고했다.

영국 엑서터대학 그린피스 연구실의 미셸 앨숍 연구원은 홍콩에 정박중인 그린피스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 호에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연분해 과정에 역행하는 오염물질들의 지구 오염의 광범위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숍 연구원은 "우리는 이러한 오염의 영향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오염의 심각성은 파악하기 어려워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세대에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환경오염이 생식기능 이상, 감작성 기능장애와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 체계 장애, 각종 종양과 암, 행동 비정상,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지역은 열대성 기후지대가 많아 유기 오염물질들이 끊임없이 대기속으로 급속히 분산돼 스며드는 환경문제는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염화물질이나 염화유기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소각 또는 제조를 포함한 산업활동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